

# 북한의 경제 위기와 정책적 대응: 강요된 자립화

이무철 / 평화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북**한이 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남북 관계, 전방위 외교 활동을 통한 외교적 고립 탈피 노력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변화 움직임은 급류를 타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대남·대외 정책에 있어 변화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9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침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내재적 모순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침체는 구소련 및 동구의 해체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난이 겹쳐 더욱 더 심각해졌다.

그러나 북한은 국내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명실상부한 김정일 체제를 구축했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북한식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경제 회복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4억 달러가 넘는 국제 사회의 무상 지

원을 통해 북한은 9 년만에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김정일식 경제 회복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50 년대의 '천리마운동'을 계승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라는 복고풍의 동원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혁적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북한을 남북 관계 개선 및 국제 사회로의 편입을 서두르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계속된 경제 침체로 약화된 국가 능력<sup>1)</sup>을 회복하고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의 성공 여부는 바로 국제 사회의 지원 유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 스카치폴은 정치체제의 생존과 기능은 네 가지 국가 능력에 의존한다. 그 네 가지 국가 능력은 사회로부터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추출 능력(extractive capacity), 사회 경제적 발전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조정 능력(steering capacity), 합의를 도출하거나 상징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정당화 능력(legitimation capacity),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강 제능력(coercive capacity)이다(Theoda Skocpol(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i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37). 스카치폴의 개념은 국가간 관계에서의 국가 능력, 즉 외교적 능력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북한의 경우 스카치폴이 정의한 국가 능력 가운데 강제 능력을 제외하고는 매우 약화된 상태지만, 배량골 외교 전술로 외교적 실리를 확보해 나갔다. 본고는 북한의 외교적 능력보다는 체제 내부 문제로 야기된 국가 능력의 쇠퇴에 주목한다. 북한의 외교적 노력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북한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실시한 생산 조직 개편 작업에 주목한다. 연합기업소를 해체한 이번 조치는 기존 계획 경제 시스템의 정상화보다는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 내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이를 통해 약화된 국가 능력을 회복하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다른 영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지도부가 의도하지 않은 분권화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산 조직 개편 작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의 단기 및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경제 위기의 심화와 국가 능력의 약화

북한의 경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북한 스스로 강조했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북한은 겪어 왔다. 이처럼 최악의 경제 상태에 놓여 있었던 북한 경제는 1999년부터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기초할 때, 1999년 중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428만 톤, 조곡 기준), 전력이 1999년 1~9월중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석탄이 1999년 1~9월중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 철도 수

송이 1999년 1~3월중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 철강이 1999년 상반기중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 기계 공업에서는 현상 유지, 시멘트 공업 호전, 화학 공업 호전, 지방 공업(경공업)이 1999년 1~9월중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였다. 또한 각종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sup>2)</sup>

그러나 현재의 경제 호전이 북한의 자체 경제력에 의한 회복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지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제 사회의 지원이 줄게 되면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은 현대의 금강산 관광 대금을 합하면 6억 5,000만 달러가 넘으며, 공식 통계 수치에 잡히지 않는 중국의 지원까지 포함한다면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sup> 이 가운데 특히 지난해 북한의 식량 사정 개선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부분의 북한 농업 전문가들은 북한의 금년도 식량 부족량을 대략 100만 톤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1월 FAO 총회에 참석했던 북한 농업부상도 금년도에 120만 톤의 식량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어, 만약 국제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들면 다시 심각한 식량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2) 박석삼(200. 4), 「전환기의 북한 경제」, 한국은행 조사국, 참조.

3) 통일부(2000. 1.20), 「2000년 북한 경제 정책 방향 전망」.

현재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의 지원과 내부 동원을 통해 에너지 및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대대적인 자체 설비 보수 작업을 통해 공장 가동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신년 공동 사설에서 밝혔듯이 북한은 '절약 투쟁 강화', '농업 부문의 역량 집중', '전력·석탄 등 선행 부문의 생산 증대' '경공업 혁명' 등을 독려하고 있으나, 예비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회복'의 의미보다는 국제 사회의 지원에 의한 일시적 '봉합'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북한 경제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공통적으로 겪었던 만성적인 '부족 경제' (shortage economy)에 외부적인 자원 제약으로 더욱 심화된 것에 있다. 부족 경제 하에서 자립 경제를 추구했던 북한은 과거 중국과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던 석유에 대한 경화 결제가 불가피해지면서 에너지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수송과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산의 위기는 식량

난과 함께 바로 공급의 위기로 이어져 배급 체계가 붕괴되고, 이에 따라 농민 시장 및 암시장의 활성화, 식량 구입을 위한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등 계획 경제로부터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북한은 기존과 같은 지배를 유지할 수 없는 조건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암묵적으로 수용하거나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회주의적 지배의 핵심 축은 바로 당 조직과 계획 경제다. 우선 당 조직은 위계적이다. 그리고 반대 세력을 용납하지 않으며 당원들의 충성과 규율에 의해 유지된다. 계획 경제는 이러한 당의 효율적 지배의 기반으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당 조직이 사회 자원의 활용 및 분배를 독점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은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활용하여 정치적 규율과 충성심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4)</sup>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 침체는 계획 경제의 약화를 불러오고 동시에 계획 경제로부터의 이탈 현상을 증가시키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이탈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 기존의 지배 방식은 이전과 같이 유지될 수 없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국가 능력의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도 사회 경제적 변화를 제도 내로 수

4) Andrew Walder(1995), "The Quiet Revolution from Within: Economic Reform as a Source of Political Decline," in Walder, 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2.

용하면서 계획 경제 시스템의 정비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약화된 국가 능력, 특히 자원 추출 능력(extractive capacity)으로 인해 기존 계획 경제 시스템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 정책적 대응: 강요된 자립화

### 강성대국과 제2의 천리마운동

이러한 조건 하에서 북한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북한은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강성대국 건설'<sup>5)</sup>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정치 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경제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성대국은 김일성 사후 등장한 붉은기 사상,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 강행군 등의 구호와 분명히 구별된다. 이전의 구호들은 위기에 대한 소극적 대응일 뿐 적극적인 목표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성대국은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인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된 구호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강성대국 건설'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상강국 및 군사강국은

이미 이루었고 경제강국만 건설하면 강성대국이 완성된다는 논리가 함축되어 있다. 그렇다면 경제강국 건설을 통한 강성대국 완성을 위해 북한이 채택한 방식은 무엇인가?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채택한 전략은 '속도전' 방식에 근거한 동원 전략이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은 김정일 총비서가 1998년 3월 14일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다시 한 번 천리마 대고조의 선봉에 설 것'을 호소한 데서 시작됐다. 이어 1999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수령님의 영도따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는 촉구와 함께 1999년 11월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를 개최하면서 북한의 공식적인 대중 운동이 되었다.

천리마운동은 50년대식 경제 발전 노선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의 경제 발전 노선이 전후 복구와 함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현재 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이다. 또한 현재의 대내외적 조건은 50년대와 매우 다르다. 50년대는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지원이 가능했던 시기라면,

5) 북한이 처음 '강성대국 건설'을 언급한 것은 「로동신문」(1998. 8.22) 정론이며, 정권 수립 50주년 기념 「로동신문」 사설(1998. 9.9)에서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라고 주장함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이 김정일 체제의 국가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강성대국 개념은 1999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2000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는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사상 증시, 총대(군사) 증시, 과학 기술 증시를 제시하였다.

현재는 세계가 단일한 자본주의체제로 편입된 상황이다. 더욱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내부 자원의 고갈로 인한 대외 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sup>6)</sup>

북한이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경제 정상화의 추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노선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제도의 수정을 가하는 개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경제 정책이 이중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김일성 유훈' 관철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체제의 기본적 특징은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추진할 때 수령의 교시(김일성 유훈)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제의 제약 하에 제도 및 정책적 변화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기존의 경제 노선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어떠한 개혁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 강요된 자립화: 생산 조직 개편

북한은 변화된 사회 경제적 조건을 반영

하여 개정된 헌법(1998. 9)에서 독립채산제를 명문화하고 원가, 가격, 수익성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개정 이후 외국인 투자 관련 법과 규정도 일부 개정하고 외자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99년 4월 채택된 「인민경제계획법」(제34조)<sup>7)</sup>에서는 수출품 생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출 산업의 활성화에 주력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농업 부문에서는 기후 풍토에 맞는 집약농법이라고 정의되던 '주체농법'을 농민들의 의사와 자체 실정에 맞는 과학농법이라고 재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분조관리제 및 감사농사 혁명의 강조 등 실용주의적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김정일 총비서의 관심 속에 과학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터넷, 컴퓨터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해외 교류의 확대가 이루어져 자본주의적 방식의 습득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문은 바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생산 조직 개편 작업<sup>8)</sup>이다. 기존의 북한 생산 단위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산과정에서 서로 연관된 이종(異種)의 공장·기업소를 하나의 경영 단위로 통합한 연합기업소, 탄

6) 이무철(2000. 2), "신년 공동 사설을 통해 본 북한의 21세기 비전", 「통일한국」, p. 19.

7) 「통일문제연구」 제11권 1호(1999년 상반기호) 부록 참조.

광 발전소 철도차량 등 대규모의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기업소를 하나의 경영 단위로 통합한 종합기업소, 그리고 일반 공장·일반 기업소 등으로 나누어 있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 침체는 연합기업소 내 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 다른 공장에 연쇄 파급 효과를 주어 10여 개 이상의 공장을 포괄하던 연합기업소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사태를 발생시켜 왔다. 이러한 종합적 생산 조직 40여 개를 일반 공장 기업소로 개편하고 독립채산제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 규모의 축소라는 조건 하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고, 독립채산제 원칙을 강화하여 공장·기업소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생산 조직 개편 작업은 경제 위기에 의한 강요된 자립화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자재공급체계의 마비 등 계획 경제의 약화로 공장 가동률이 20~3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재정 수입의 원천인 거래수입금(소비재 거래시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 국가기업이익금(기업 이윤에 부과되는 직접세의 성격) 등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시 국가가 자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

게 되어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재정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합기업소를 해체하여 축소된 공장 기업소 가운데 기간 산업을 담당하는 핵심 공장 기업소에 중앙의 재정 지원을 집중하고 나머지 각 공장 기업소에게는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직접적인 개입·관리를 통해 재정 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기존에 국가가 담당했던 부문의 일부를 각각의 생산 단위에 전가하는 형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생산 조직의 개편이 다른 영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지도부가 의도하지 않은 분권화 경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독립채산제의 강화와 분권화 가능성

생산 조직의 개편 작업은 북한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독립채산제, 자재공급체계, 금융제도 등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분권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제기되는 생산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

8) 통일부(2000. 2), 「북한의 산업 조직 개편 동향」, 통일부가 북한의 헌법 개정(1998. 9) 이후 2000년 1월까지의 「로동신문」, 중앙방송 등 북한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공장·기업소 관련 기사를 면밀히 추적, 분석한 이 자료에 의하면 '연합기업소', '종합기업소', '연합총국' 등 종합적 생산 조직 40여 개가 일반 공장 기업소 및 관리국 체제로 개편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업소가 부분적으로나마 독자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영 관리 방법이다. 이러한 독립채산제는 공장·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은행을 이용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으로써 물자 구입과 판매에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익금에서 국가 몫을 공제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기업소의 경영 상태 개선 및 종업원들의 물질생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결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다. 북한에서도 1962년부터 중앙의 국영 기업소를 대상으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70년대 초부터 이를 지방 산업 공장을 포함한 농업·공업 부문 그리고 비생산적 부문인 유통 부문에 이르기까지 확대·실시해왔다.<sup>9)</sup>

현재 북한은 독립채산제의 강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독립채산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독립채산제를 통해 경제의 효율을 제고할 목적이라면 국가의 중앙 집권적 지도를 완화하고 기관·기업소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독립채산제 강화를 위해서는 자금공급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다. 사회주

의체제에서는 기업 경영이 부실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최종적으로 국가가 손해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는 별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재정 악화라는 조건 하에서 북한은 자금 공급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업 경영의 부실로 부족하게 된 자금만을 은행 기관이 계획화하여 대부로 주는 자금보장체제에서 기업소들이 자체자금으로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모든 자금은 은행에서 대부를 받는 자금보장체제를 확립하였다.<sup>10)</sup>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일 은행제도를 이원적 은행제도(중앙은행의 기능과 상업적 기능)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생산 조직의 개편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연합기업소 해체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분권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연합기업소가 해체된 상황에서 국가 경제 기관이 모든 공장·기업소를 직접적으로 지도·관리하여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강화하려면 행정 기구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행정 기구는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 기구가 축소되었다.

이처럼 행정 기구의 규모가 축소되고 연합기업소까지 해체된 현 시점에서 국가 경제

9) 이무철(2000. 4), "북한의 금융제도가 변하고 있다", 『통일한국』, p. 83.

10) 문성민(2000. 2), 「북한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조사국, 참조.

기관의 공장 기업소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 행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북한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공장·기업소에 대하여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그 대신 독립채산제를 더욱 강력하게 관철시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 맺음말

에너지, 식량, 외화 부족 등 총체적인 경제 위기의 심화는 배급제 및 자재공급체계의 마비를 가져왔고, 그 결과 파생된 사회 경제적 변화를 북한은 제도 내로 수용하면서 체제 정비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 운수, 철강 등 중요 기간산업들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련의 제도적 조치들이 별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경우 스카치폴이 주장한 체제의 생존과 기능을 위해 필요한 네 가지 국가 능력 가운데 강제 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이다. 자원 추출 능력의 쇠퇴가 조정 능력과 정당화 능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변화된 현실을 인정한 일련의 조치들은 단기적으로는 체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도부에게 체제 전환을 위한 여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자원 추출 능력을 회복

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조치들의 결과로 야기 될 북한 경제의 분권화와 맞물려 심각한 체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및 국제 사회로의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한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지원 및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 국가 능력의 회복과 함께 체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개혁·개방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동구와 중국의 경험을 통한 학습 효과를 통해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해도 체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혁의 속도, 범위, 시기 등을 조절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식의 자력갱생이든 체제 전환을 시도하든 간에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 세계 자본주의 사회로의 편입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의 북한이다. **9**